

## ‘위안부’문제로부터 생각하는 동아시아의 평화

2012년 11월 19일

오오모리 노리코(大森典子)

변호사·‘위안부’문제 해결 올 연대 공동대표

### ‘위안부’문제란 무엇인가

하시모토(橋下) 오사카(大阪)시장이나 아베(安倍) 자민당 총재 등이 최근 ‘위안부’문제에 대해 발언을 하고, 그러한 발언에 따라 신문 등에서도 이 문제가 자주 보도되고 있다. 그런데 ‘위안부’문제란 무릇 어떠한 문제인가, 많은 국민에게 이 말은 귀에 익숙하지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 사실의 내용은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을까. 서점에 진열되어 있는 “WILL” 등의 잡지에서는 “관환에 의한 강제연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유일한 문제라며, “강제연행”이 없었으므로 그녀들은 스스로 돈을 벌러 간 매춘부라 말한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그녀들은 노예상태에서 일본군 병사를 상대할 것을 강요당한 ‘성노예’라는 공통의 이미지가 있다. 당시 병사로 ‘위안소’에 간 미즈키 시게루(水木シゲル)는, 가서 보니 ‘피아(比一屋)’(당시 군인들이 ‘위안소’를 부르던 속칭. ‘피’는 중국어로 성매매 여성을 멸시해서 부르던 말: 역자 주) 앞에 장사진을 이루고 있어 도저히 자신의 손서까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단념했다는 회상기를 썼다. 많은 피해자가 말하는 피해 상황을 들으면, 그녀들이 노예상태였다는 점은 통상의 인간의 상상력을 가지고 있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녀들이 받은 피해가 인간의 존엄을 송두리째 빼앗은 용서할 수 없는 인권침해였다고 인식하는 것이 보통의 인권감각일 것이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되풀이해서 그녀들은 ‘공창’이었으며 일본 정부가 사죄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즉, 일본이라는 사회는 이러한 피해가 곧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느낄 수 없는 인권감각이 마비된 사회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 왜 지금 ‘위안부’문제가 대두되는가

2011년 12월, 교토(京都)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노다(野田) 총리에게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2012년 8월 10일에는 이 대통령이 독도(다케시마)에 ‘상륙’하여 한 순간에 한일관계가 긴장되었다. 그리고 이 ‘상륙’ 행동의 배경에 ‘위안부’문제가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 ‘위안부’문제는 한국에게 있어 대일본제국에 의한 식민지 지배의 상징적인 피해로 인식되고 있다. 이 문제의 성실한 해결 없이 식민지 지배에 대한 청산은 끝나지 않는다는 한국의 국민감정이 정부를 강하게 밀어붙여 움직이게 하고 있다. 물론 그 근거가 되고 있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석과 최근의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있다.

다른 한편 중일관계도 센카쿠제도(尖閣諸島)(중국명 댜오위다오)문제를 계기로 현재 최악의 사태까지 악화되고 있다. 중국의 반일행동은 반일교육에 의해 길러진 젊은이들에 의한 것이며, 반일교육이 원인이라는 논평도 매스미디어에 의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지만, 나는 중국인 성폭력 피해자(‘위안소’ 제도의 말단 형태에 의한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재판을 담당하면서, 많은 중국인이 침략전쟁에서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일본에 대해 얼마나 깊은 분노를 느끼고 있는가를 실감할 수 있었다.

일본 사회가 침략전쟁에서 이웃 나라에게 어떠한 피해를 입혔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事實)을 공유하고, 전쟁을 반성하여 그 피해에 대해서 도저히 죄를 갚을 수는 없더라도 사회의 마음을 계속 가지면서 진정한 신뢰관계를 쌓지 않는다면, 이번 문제가 표면적으로 수습되더라도 늘 되풀이 되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이웃 나라들과의 사이에서 이러한 과거청산을 성의를 가지고 행하여, 일본 사회가 제대로 된 역사 인식을 공유하고 두 번 다시는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결코 동아시아에서 진정한 우호관계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한일, 중일 사이의 최근 사태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오오모리 노리코(大森典子) 씨 약력

변호사. 이에나가(家永) 교과서 재판, 중국인 '위안부' 재판 등을 담당. 현재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 공동대표.